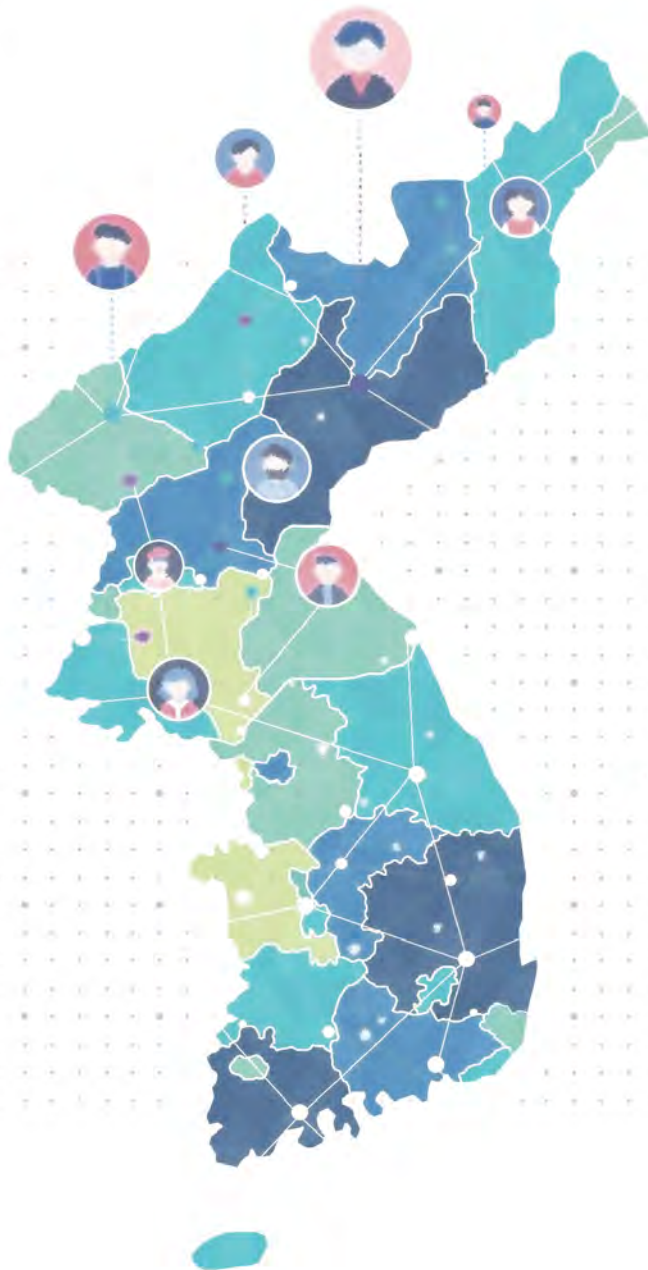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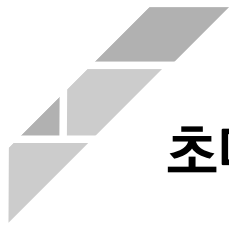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남북한 경험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2018. 11. 30.(금) 14:00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





초대의 글

열악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배경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게 있었다는 점이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 다양한 직업 능력개발 정책과 지원으로 양질의 인력이 양성·공급되어 우리나라의 근대화, 현대화, 그리고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사회에서 공적 개발원조(ODA) 등 여러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한 간에도 개성공업지구나 북한 진출 기업에서 북한의 인력 활용으로 경제 협력의 고리를 연결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즉,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 제고는 북한 주민의 직업 및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의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 기본연구사업으로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 능력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이번 포럼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PROGRAM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남북한 경험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 일 시 : 2018. 11. 30.(금) 14:00
- 장 소 :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
- 세부일정표

시 간	내 용
~14:00	등 록
14:00~14:10	국민의례 인 사 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주제발표	
14:10~15:10	•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 -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임정빈 성결대 교수
15:10~15:20	휴 식
종합토론	
15:20~16:20	좌 장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 김승용 前 한국폴리텍대 강릉캠퍼스 학장 -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16:20~16:30	질의응답 / 종료



CONTENTS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남북한 경험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Part 0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1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Part 0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 17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Part 03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45

임정빈 성결대 교수

◎ 종합토론 67

01 Part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2018.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선임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ontents



I. 서론

II.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III.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비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협력 영역

2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론

남북관계의 변화

과거

분단 이후 전쟁도
있었고
상호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정상
회담도 있었음

현재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

미래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3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서론

국가 발전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

- 남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
- 경제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인적자원
- 우수한 인적자원은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지원으로 양질의 인력 양성과 공급으로 이어짐
⇒ 우리나라 근대화·현대화·국제화의 견인차 역할

4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서론

성공 사례의 전파와 남북한 협력

- 남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사회에서 ODA 등 여러 형식으로 해외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간에도 개성공업지구나 북한 진출 기업에서 북한 인력 활용으로 상호 경험의 고리를 연결
-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 및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은 경험과 통일 과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분야의 협력은 시대적 과업이며
이는 북한 주민의 직업 및 사회적 안정, 통일 비용 절감에 큰 기여

5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론

북한 직업교육훈련 환경에 대한 이해

- 직업교육훈련: 산업현장 적용에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 정책, 경제 수준, 산업 인프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북한의 경제정책
 - 제7차 경제개발계획수립을 통해 공업의 양적, 질적 개선과 기술혁신에 중점
 - 나선, 나진, 개성 등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경제 발전 추구
 - 그러나, 경제정책 잇따라 실패
- 북한의 1인당 GDP: 800~1,100 불로 남한의 70년대 중반수준
- 전 분야 산업기반 취약: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열악, 전기부족, 별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낙후된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의 열위 등

산업화 초기 남한 발전 사례와 같이 북한도 초기 산업화 구축을 위해
대단위 공단 설립하여 외자를 통한 산업시설확장, 사회간접시설(SOC)
확충, 농·수산업의 현대화 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

6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론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 협력

- 최근 북한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은 발전적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풀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은 11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년인구가 현대적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능력 갖추고 있음

7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서론

- 그러나, 대학교육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져있음
- 경제난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서도 출석률 하락, 수업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규모와 질은 미흡할 것으로 추측
- 또한 북한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직 인력으로 적합한 노동인구가 풍부하게 존재
- 북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취업인구 중 36%가 농림어업, 30%가 광공업에 종사
- 그러나 1990년대 초 경제난 이후 북한의 광공업 부문에는 가동이 정지된 기업소들이 많아 광공업 취업인구 중 상당수는 실질적 실업 상태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남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계획을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어야 함

8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I.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교육체계 개편

-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발표한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 1972년부터 40여 년간 지속해온 11년제 학제를 바꿈
- 중등일반교육체계 개편
 -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기술고급중학교 설립
 - 전국 일체 시험제 도입(전국수능시험)
- 대학교육체계 개편
 - 대학이 양성해야 할 인재를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로 구분
 - 종합대학체계를 도입: 부분별 종합대학과 지역별 종합대학으로 개편
 - 직업기술대학 전환 추진

9 KRIW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II.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정보화 추진

- **교육의 실용화**
교육내용을 현실이 요구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 **교육의 종합화**
통합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기초 내용과 전공 관련 내용을 밀착시킴
- **교육의 현대화**
교육내용을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로 끊임없이 갱신
- **교육의 정보화**
교육에 컴퓨터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10 KRIW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Ⅱ.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북한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당의 방침과 최근 동향

- 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당의 방침

-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강조
-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
 - ⇒ 자체의 힘으로 주체형의 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는 것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성을 땀)
- 교육체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반공반독(半工半讀) 형태의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
-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기술인재양성 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혁명화노동 계급화 할 것을 주장
-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은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임

11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Ⅱ.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북한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당의 방침과 최근 동향

-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당의 방침

-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술교육 강화를 주장
- 근로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
-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
-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
-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앞세운 기술교육을 주장

12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Ⅱ.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북한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당의 방침과 최근 동향

- 최근의 변화

- 관리 기구 및 노동력 조절(정)권을 활용한 효과적인 노동력 이용
- 기업체의 종업원 기술기능 수준 향상 노력 강조
- 인재관리권 행사로 기술집약형 기업체로 육성

13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Ⅲ.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교

교육 전반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교육이념	· 홍익인간의 이념과 · 민주주의 교육 이념 구현	· 공산주의 이념 구현을 위한 인간양성
학제	· 6-3-3-4제	· 5-6-4(6) 제
의무교육연한	· 중학교까지 9년	· 유아교육 높은반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
유아교육	· 개인의 성장발달 중시 · 자율 선택적 교육 ·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음	· 공산주의적 인간육성 중시 · 국가 사회적 지원 · 낮은반 1년과 높은반 1년으로 편성하고 높은반 1년은 의무 교육에 포함
초등교육	· 초등학교 6년	· 소학교 5년
중등교육	·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전, 후기 구분	· 고등중학교 6년 · 전, 후기 구분 없음

14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Ⅲ.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교

교육 전반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고등교육	-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2~3년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4년 - 종합대학의 성격	- 전문학교(일부는 기술대학) 3년 - 단과 대학 4년 - 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4~6년 특성화 대학의 성격
사회교육	- 직업능력 향상과 교양 함양을 위한 계속교육훈련 - 다양한 기관과 매체를 통해 교육	- 직업능력 향상과 정치교양 함양을 위한 계속 교육훈련 -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심
교육과정내용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주지 주의적 지적 능력 중시	- 실제생활에서의 응용능력을 중심으로 교육과 노동의 결합 - 학습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 강조
교육행정	- 중앙 집권형 - 교육 자치 지향 - 교육 행정의 전문성 중시 - 지방의 경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	-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형 - 당 중심의 정치예속 - 지방의 경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

15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Ⅲ.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교

남북한 직업기술교육 체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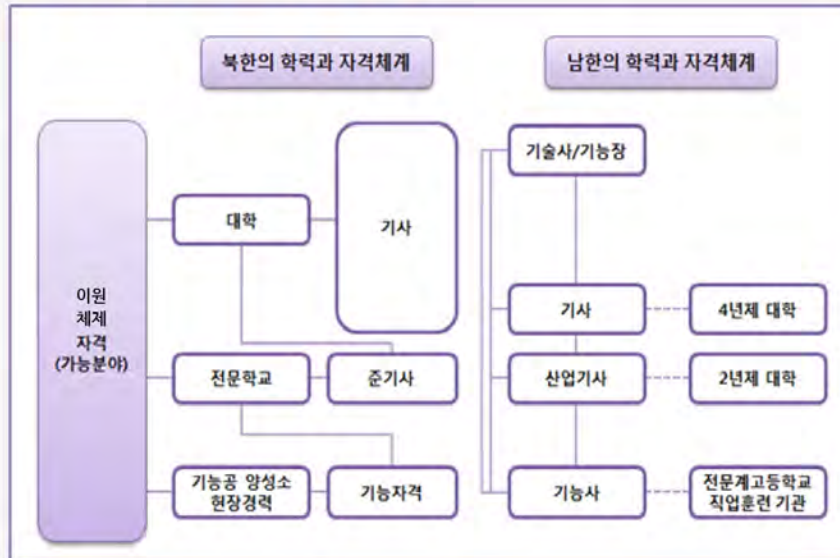
구분	남한	북한
국민공통기본교육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중학교까지
전문 직업기술 교육	- 실업계고교와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기술고급중학교 - 전문학교(일부는 기술대학으로 개편) - 단과대학 - 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계속 직업기술 교육	-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사설학원 - 야간 및 방송통신 대학 - 사업내기술대학, 기술대학	-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 현지 학습반 - 기능공학교, 양성소 - 야간 및 방송통신 대학
진로 분화의 시기	중등 후기 교육 단계 : 고등학교 진학시 (만16세)	중등 이후 교육 단계 :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만16세)

16 KRIW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Ⅲ.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교

남북한 기술분야 국가자격 제도 비교

- 기술 분야 남북한 자격등급 체계 비교



17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Ⅲ.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교

남북한 국가기술자격제도

- 남북한 자격체계 비교(기술·기능분야)

구분	남한	북한
자격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준기사, 기능: 각 등급은 급수로 세분화 되어 있음
등급별 급수	없음	자격에 따라 다양한 급수로 운영되고 있음
응시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1조 • 기술사: 4년제 졸업+6년 등 • 기능장: 기능대학(기능과정) 졸업자 등 • 기사: 4년제 대학 졸업자 등 • 산업기사: 전문대학 졸업자 등 • 기능사: 자격제한 없음	기사: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등 준기사: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 등 • 기능: 기능공학교, 양성소 등의 교육훈련기관 수료자, 현장경력자 등, 제한이 없는 자격도 있음 ※ 등급별 상위 급수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현장 경력을 요구
검정 방법	기술사 • 필기: 주관식 서술형 및 단답형 • 면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주관식 서술형, 작업형, 복합형(종 목에 따라 다르게 운영)	준기사, 기사 • 필기: 외국어, 전공, 김일성로작 등 • 구답: 전공 등 • 실기: 준기사에 한하여 자격 종목에 따라 실시 • 논문: 현장실습(6개월)중 작성 제출 기능사 • 필기: 주관식 서술형 • 실기: 작업형
관리운영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등급 및 종목에 따라 다양함

18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의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

구분	제도적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역량개발
주요 내용	· 직업훈련 관련 법·제도 · 자격검정제도 · 정보시스템 설계 (취업알선, 고용정보, HRD전산망 등)	· 직업훈련원·기술대학 건립 · 관련 기자재 지원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 직업훈련 운영 능력 배양 · 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 관련 공무원 역량 개발
사업 수단	· 개발경험 정리(KSP) 비교우위 선정 · 정책자문 개발조사사업 · 전문가 파견 · 초청연수	· 유·무상 프로젝트 사업 · 기자재 지원	· 초청연수 · 전문가 파견·WPK · PPP사업
담당 기관	· 고용부 · 외교부(KOICA) · 재정부(EDCF)	· 외교부(KOICA) · 재정부(EDCF) · 고용부	· 외교부(KOICA) · 재정부(EDCF) · 고용부

자료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2011), 김철희, 이영현, 조경원(2012), 25쪽 재인용

19 KRIWET 한국국제협력단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ODA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모듈구성

프로그램	모듈(프로젝트)	목표	주요활동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 정보 제공 · 기술인력 수요 및 공급 격차 확인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 노동시장수요 및공급동향분석 · 격차 분석 · 기술인력 양성 핵심분야 선정
	직무표준, 훈련표준, 훈련과정 개발	· 노동수요(고용자)에 부합하는 직무표준 개발 · 훈련표준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 훈련표준·직업훈련과정간 직접 연계	· 직무분석 및 직무표준 개발 · 평가틀 개발 · 훈련표준개발 및 직업훈련과정과 연계
	기술인력 양성	· 직무표준, 훈련표준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제공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재직자 능력 업그레이드
	기술분야 자격검정	· 직무표준에 따른 기술능력 검정 및 자격화	· 자격검정 실시 및 종목표 · 수준별 자격증 발급 ·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1), 김철희, 이영현, 조경원(2012), 27쪽 재인용

20 KRIWET 한국국제협력단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콘텐츠 분류 및 내용

분류	내용	세부 특화지원 내용
직업훈련 제도·정책	· 직업훈련 제도·정책	· 법령 제·개정(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 실업자(양성) 재직자(향상) 훈련 시스템
	· 직업훈련 재정	· 고용보험기금 확보 · 직업훈련 제도 변화에 연계한 재원 확보(의무제, 분담금제) · 부담주체별 고용보험 요율(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관리·서비스 전달	· 직업훈련 교사양성 및 역량 강화	· 훈련교사 양성·향상 · 교사 교육과정 개발 · 교사 인력 수급 · 평가 및 처우 개선 등
	· 직무능력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운영 · 직업기초능력 개발 · 국가자격체제 구축
	· 교육과정 개발	· DACUM,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 직무분석 교재 개발 ·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CBC)
	· 직업훈련기관 평가인정	· 평가기준 개발 · 기관 프로그램 평가(서면 현장 등) · 평가인정제도 도입
	· 진로지도	· 진로정보망 등 구축·운영 · 고용서비스 제공

21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콘텐츠 분류 및 내용

분류	내용	세부 특화지원 내용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	· 직업훈련 시설	· 직업훈련원 건축 · 시설·장비 제공 · 자립발전성 제고(지속가능성 방안 마련)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 인력·훈련·숙련 전망 · 노동시장 및 고용동향 제공 · 노동시장(직업훈련) 정보망 구축·운영(HRD-net)
	· 산학협력	· 현장실습 및 교육과정 개발 참여 · 인력 교류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자료 : 김철희, 이영현, 조경원(2012). 2쪽과 187쪽의 내용을 통합 정리한 것임.

22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의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

단계 내용	제도 (1단계)	역량개발 (2단계)	인프라 구축 (3단계)
기반	· 국가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 인력 수요·공급 분석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법·제도 · 교육훈련 재정	· 교육훈련과정(훈련기준 등) 개발 및 개선 ·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사 양성 · 교육훈련기관 운영	· 교육훈련기관 설립 · 교육훈련 기자재 지원 · 교사 양성기관 설립
자격	· 자격 법·제도 · 자격체계 설계 · 자격취득자 활용 등	· 자격 관리 운영 · 자격종목 개발 · 문제 출제 · 검정 시행	· 검정기관 및 검정장 설립 · 검정 시설·장비 지원 ·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자료 : 김덕기(2014). 77쪽.

23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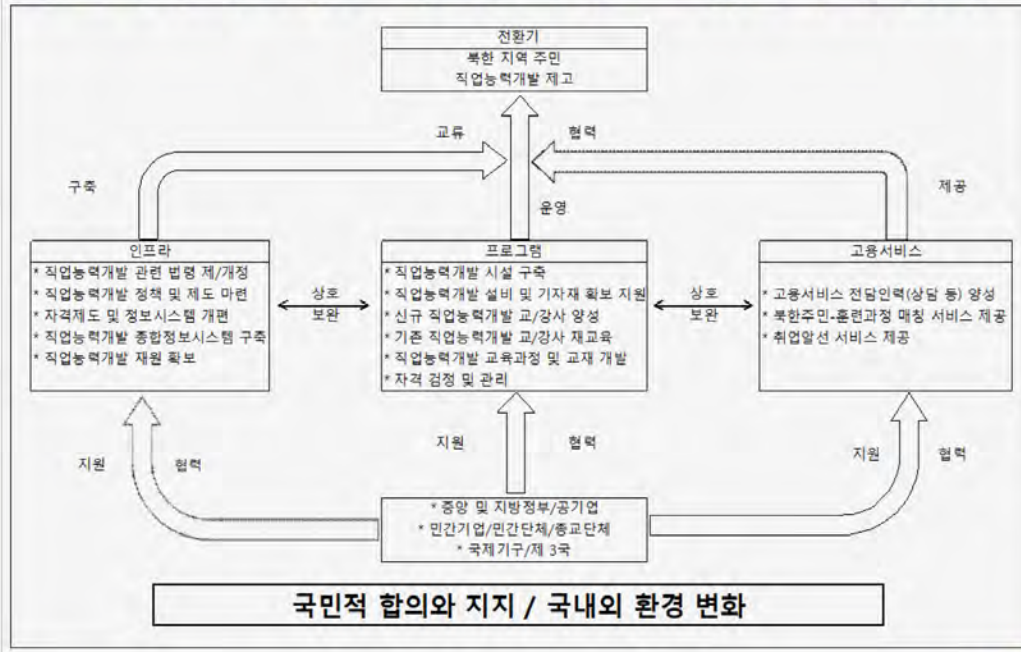
통일대비 북한주민 직업교육훈련 협력체계(안)

영역	정의	하위요소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 대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의 제·개정 및 재정 확보	·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제·개정 ·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제도 마련 · 자격제도 및 정보시스템 개편 ·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직업능력개발 자원 확보 · 직업능력개발 시설 구축 · 직업능력개발 설비 및 기자재 확보 지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북한 주민 대상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훈련과정)의 제공	· 신규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양성 · 기존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재교육 ·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자격 검정 및 관리
고용서비스 제공	북한 주민 대상 구직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상담 등) 양성 · 북한주민-훈련과정 매칭 서비스 제공 ·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24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직업능력개발 체계구축 협력 영역

통일대비 북한주민 직업능력개발 교류협력체계(안)



25 KRIW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69차 인재
개발(HRD)
정책포럼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2018. 11. 30.

홍 순 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목 차

-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III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2018 한반도 정세 변화 특징 : 대화 국면으로 급진전되어 남북경협 기대감 증가
 - 북한 변화에서 시작 : 핵 가진 경제빈국에서 (체제안전 담보하에) 핵 없는 개도국을 선택
 -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및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북핵 협상 시작 : 남북 및 북중·북미 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선대의 유훈' 언급은 2013년 6월 이후 5년만
 - 국가 전략 변화 : 경제·핵 병진 노선(2017. 11. 29 핵무력 완성) → '경제 건설 우선' 노선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 (4/20,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 자신들의 전략 변화를 대내외 공개적으로 공표 : 종전보다 과거로의 회귀가 쉽지 않은 구조
 -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 외교 : 한반도 운전자론
 -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부각과 남북간 빠른 신뢰 회복
 - 특히 남북한 특사 상호 교환과 4.27 판문점 선언에서의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합의 등은 매우 괄목한 성과로 평가
 - 북미 정상회담 결렬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번개' 남북정상회담(5. 26) 제안은 이를 반영
 -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으로 진행,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재확인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경제협력 가속화 → 남북 평화번영 이룩 /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 철도·에너지 경제공동체 제안(8. 15 경축사) + 동해·서해 남북공동특구 조성 협의(9.19 평양공동선언)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북미정상회담 : 신뢰구축 프로세스 진행 중이며, 양측의 정치일정에 따라 진행 예상
 - 4.27 판문점 선언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에 서명한 최초의 문서라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은 북미 정상이 이 내용을 재확인한 것임
 - 북미 정상은 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북미관계 정상화) ②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 전쟁포로 전장 실종자(유해) 송환 등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김 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인격에 영리한 협상가' 칭찬
 -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해 "내 책상위 핵단추를 없애버린...전세계 사람들이 존경해야 한다"
- 다양한 정상회담의 연쇄적 개최 : 내용과 형식, 장소 등에서 파격적
 - Top-Down 방식의 대화 :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을 정리하고, 실무협상에서 세부 사항 조율
 - 최근 7개월간 남북정상회담 3회, 북중정상회담 3회, 북미정상회담 1회 개최, 2018년 하반기에도 추가 연쇄 정상회담 기대 (북중, 남북, 북미, 북러, 북일 등)
 - 김정은-트럼프의 개인적 캐릭터로 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행 : 장점 & 불안정 요소
- 2018년과 2020년은 북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
 - 북한 : 2018년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의 중간 시점, 정권수립 70주년(9.9)
 - 2020년은 경제발전 5개년 및 10개년 전략계획(2010~20) 완성, 당창권 75주년(10. 10)
 - 미국 : 트럼프의 대통령 중간 및 본선 선거 (2018. 11 / 2020. 11)

5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북한의 Needs와 Wants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절실

북한의 Needs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및 여건 조성

북한의 Wants

북미관계 (최고의 안정) → 남북관계 (최선 or 차선의 제한된 안정) 선택

2017년	남북관계	2018년	북미관계	2021년
핵무력 완성 (평가)	(환경조성)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향상(계획)	(개선기대)	강성국가 (제8차 당대회)
	⇒		⇒	

→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 새로운 전략노선(경제 건설 우선)

북한에게 2018년을 포기할 수 없는 필요와 간절함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4.20)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제시

자료 : 김동업, "남북·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전망,"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북한연구소 학술세미나, 2018, 6. 18.

6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판문점 선언 이행 현황

II. 군사적 긴장 완화 (2조)	① 적대행위 전면 중지	•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전단살포 중단 및 수단 철폐(5.1-4)
	②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행 의지 상호 확인 및 입장 교환
	③ 서해 평화수역 조성	•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동항 운용 정상화(7.1)
	④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 군통신선 완전 복구 : 서해지구(7.16), 동해지구(8.15)
	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 △장성급군사회담(6.14/7.31) △군사실무회담(9.13-14) △통신실무접촉(6.25)
III. 항구적 평화 체제 (3조)	① 단계적 군축	• 신뢰구축을 통한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안 검토·협의
	② 종전선언 / 평화협정 전환	• △북미정상회담(6.12) △북미고위급접촉(5.9, 5.31, 7.6-7) △역류 미국인 3명 송환(5.9) △한미연합훈련 유예(6.19) △미군 유해 55구 송환(7.27) 등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5.24)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등
IV.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5.26, 판문점 통일각), •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개최 예정(9.18-20)

자료 : 임을출, 평양 정상회담 평가와 중소기업 남북경협 전망, 2018, 10. 10.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9. 18~20)

- 평양 남북공동선언(9. 19)과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북한 인민들 앞에서의 첫 대중 연설



- 백두에서 한라까지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만들 것을 약속

-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및 민족균형발전	인도협력 및 다방면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채택·이행 -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조건 마련시)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 환경협력 적극 추진, 우선 산림 협력 성과노력 -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속 개소, 면회소 시설 복구 - 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 편지 교환 우선 해결 - 문화·예술교류 증진, 우선 10월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 국제경기 공동진출, '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협력 10.4선언 11주년,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 北,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폐기 * 유관국 전문가 참관 (美 상응조치시)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 - 南北,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정 상 긴밀 협력 - 김정은 위원장 조속 시일 내 서울 방문

I.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

○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 세계에 대한 비핵화 선언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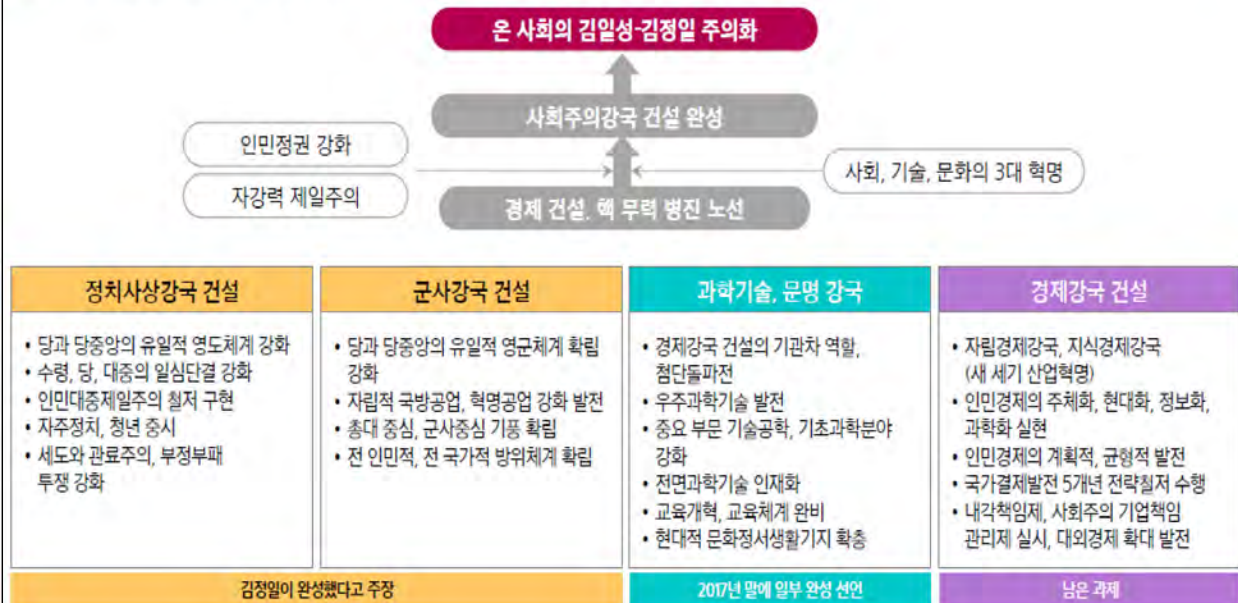
- 북한의 경제성장 개황 : 국제사회 제재로 경기 회복세 후퇴
 - 2017년 북한의 실질 GDP은 전년비 3.5% 감소(김정은 정권 6년간 0.5%)
 - 2016년 플러스 3.9%에서 마이너스로 반전 (1997년 -6.5% 이후 20년만에 최저치 기록)
 - 광업(8.4%→ -11.0%), 중화학공업(6.7%→ -10.4%), 수력발전(22.3%→ -2.9%) 큰 폭 감소
 - 대북제재로 대중수출 감소(-37.2%), 상반기 가뭄 등에 기인, 2018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8. 7. 21.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북한 7차 당대회 (2016년) - 주요 노선



자료 : 삼성증권, 북한투자 전략 보고서, 2018. 6. 12.

15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김정은체제는 '경제-핵 병진 노선' 하에 경제강국 건설 위해 대내외 개혁 실시 중
- 대내적 : 농업개혁(6.28 방침)과 기업소 개혁(12.1 조치)을 추진 중
 - 대외적 : 외자유치 확보를 위한 경제개발구 확대 정책 추진중(5개 중앙급, 17개 지방급)
 - 최근 들어 과학기술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전력 등 4대 선행부문 우선 해결 강조 (시장화, 현대화·과학화, 실리주의, 국산화·주체화, 개방화)

< 최근 북한의 주요 경제개선 조치 현황 >

일자	주요 내용
2012. 1	- 경공업, 농업부문 정상화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언급(신년사)
2012. 4	- 김정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문제 해결 제기(4.6 당 중앙위 일꾼들 담화) -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경제개선 조치 실시"(4.15 연설)
2012. 6	- 농업분야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경제개선조치(6. 28방침)
2012.12	-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 독립채산제, 지배인 책임경영제 전면실시(12. 1조치)
2013. 4	- 北 최고인민회의, 경제 각료 대폭 교체(경제개혁의 상징인 박봉주 재임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경제개발구법 제정(2013. 5)
2013. 5~15. 11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경제개발구 발표(2013. 11) : 21개 중앙급·지방급 ·지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 특구 개방 정책' 추진
2014. 1	- 김정은 제1비서, 경제건설을 주 방향으로 표명, 남북관계 개선 강조(신년사)
2014. 5	- 포전담당제(가족영농제 형식)로 집단적 성과와 차등 배분 확대 (5. 30 조치)
2015. 1	- 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인민생활 관련 언급 증가(신년사) ·'건설(38회)과 경제(15회)' 등의 단어 증가, 강성국가·선군 단어는 감소
2016. 5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제7차 당대회, 과학기술강국 실현과 전력 우선 해결)

16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과학기술 정책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한 '과학기술 중시 사상' 강조

- "새세기 산업혁명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 완성 주창, 과학기술을 핵심동력이라 강조

- 현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로 규정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 조치'를 시행
-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살림집 제공), 각종 과학기술전시회 개최, 과학교육의 해(2017) 지정
- 김정은의 주요 동선 : 새해 첫 현지도(국가과학원), 방중시 중국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
-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2018.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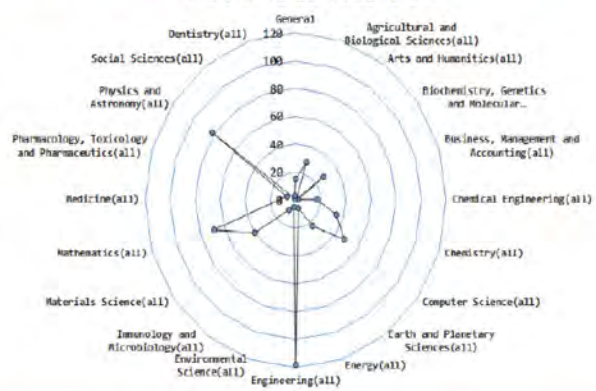
<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 SCOPUS 분석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북한인도	0	1	0	0	1	1	1	10	24	24	62
국제협력	26	23	31	33	38	101	40	45	68	92	487
계	27	24	32	33	39	102	41	55	92	106	549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 2007~2016, 2017. 12.

(그림 2-3) 북한 논문의 주제분야별 분포



17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대외개방 확대 조치 실시

- 법 제도 정비 : 2011년말부터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 집중 제·개정

- 외국인 투자법제 제·개정 : 14개 법제 보완(외자기업 특혜, 투자보호·3통보장 등 국제기준 강화)
- 경제개발구법 제정 : 2013년 5월 29일 제정,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확대하기 위함

- 외자유치기구 정비 : 본격적인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사전 조치, 경제개발기구 개편 등

- 기구 개편 : 경제개발 10개년계획수행을 위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총로 승격
- 신규 출범 :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전담을 위해 '조선경제개발협회' 신설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경제특구 관련법 제·개정 현황 >

일자	주요내용
2011. 11. 29	-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개정
2011. 12. 3	-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우편, 전화, 팩스 자유로운 이용, 재산 국유화 금지, 토지임대기간 50년까지 확대,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 반출 제한 없음
2011. 12. 21	-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개정
2013. 5. 29	- 경제개발구법 제정 관리 소속 :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 구분 :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18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총 22개의 경제개발구 신설 :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 기존특구(5)는 대규모·복합형, 22개 경제개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경제특구
- 특성별 분포 : 일반적인 경제개발구 6개 + 공업개발구 4개 + 농업개발구 3개 + 관광개발구 4개 + 수출가공구 3개 + 첨단기술개발구, 국제녹색시범구 1개씩

< 북한이 발표한 지방급 경제개발구 >

지방급 경제개발구	주요 산업	투자액 (억달러)
북중접경권 (5개)	압록강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	2.4
	만포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	1.2
	위원공업개발구 -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등	1.5
	온성성관광개발구 -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등	0.9
	혜산경제개발구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서해권 (3개)	송림수출가공구 -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등	0.8
	신명관광개발구 - 휴양, 체육, 오락 등 복합 관광지구	1.4
	와우도수출가공구 - 수출 가공조립업	1.0
동해권 (5개)	현동공업개발구 - 정보산업, 경공업, 광물자원 활용	1.0
	흥남공업개발구 -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1.0
	북청농업개발구 -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수산가공업	1.0
	청진경제개발구 - 금속가공, 기계제작, 경공업 등	2.0
	어랑농업개발구 -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0.7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



* 중·강남경제개발구는 규모·성격 미발표

자료 : 통일부, 북한이해 2018, p. 142.

19

II.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북한 시장화 발전 추이 : 현재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혼합형 경제

- 1958년에 재래시장이었던 인민시장, 농촌시장이 '농민시장'이란 이름으로 공식 허용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비공식 시장이 '종합시장'으로 합법화
- 2014년, 5.30담화(인센티브 인정 등) 후 장마당(종합시장) 급속 확대
- 북한 사회 전역에서 시장화 현상 확산, 국가 운용 일부로 활용(음성적 재정수입)

· 개인 돈벌이(자영업) 붐 : '돈이면 최고' 북한주민들의 약 80%가 장사 경험

[경험 비율 : 2012년 70.2% → 2013년 74.4% → 2014년 78.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시장화와 정보화 확산 : 시장-계획경제의 '불편한 동거' → 점차 시장경제 우세 전향

- 북한 종합시장 확대 : 2010년 200개 → 2015년 400여 개 → 2017년 8월 468개
- 주민들의 시장활동 참여 비율 및 소비지출 비중은 약 70~80%에 달함(탈북자 증언들)
- 정보화 확산 : 휴대폰 500만대(스마트폰 비중 증가), 남한 드라마와 영화, CD, DVD 등
- 시장화 영향 : 사회주의 계획경제 '보조' 기능 → '체제 유지의 주요 축과 공생관계' 고착
 - 금융 시장은 신흥부유층(돈주)이 주체가 되어 고리대금융 등 사금융시장에 관여, 확산
 - 주택 시장은 초기 단순 거래에서 최근엔 권력기관과 결탁해 신규 건설과 분양 등 확산
 - 평양 중심부 신축APT는 10~15만 달러, 철거전 입사증(분양권)도 1~2만 달러 거래(2016년)

20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전국의 시장화 확산 : 장마당(종합시장)은 400개 이상, 골목장 포함 800여개 이상



북한 장마당(평양 2교)



북한 간부집 한국산 TV



휴대폰 보급(약 400만대)



평양의 분양 아파트

21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북한의 산업 수준은 대략 남한의 70~80년대 수준이나, 최근 들어 변화 모색 중



장마당(500여개)



휴대폰(400만대)



온라인 구매



24시 편의점(100여개)



피자가게



주유소



태양광 판넬



화장품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22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김정은 시대 완공 5대 거리



창전거리[2012.6, 대동강변, 45층고층A 14동]



은하과학자거리[2013.9, 평양, 21개동]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10, 24개동]



미래과학자거리-과학기술전당[2015.11, 속성, 평양 대동강변]



려명거리[2017. 4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2배 규모]

23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려명거리의 다양한 모습



아담한 소층 살림집



녹색형의 거리



볼야경을 이룬 려명거리



자연 에너지형 려명거리

24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려명거리의 다양한 모습



거리속의 거리



려명거리의 이채로운 야경



려명거리 종합상업구 내부

25

Ⅱ.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특징 : 시장화

○ 북한의 신용카드



26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구상의 개념

- 남북관계 개선과 경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영토를 동북아,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경제통일 과정)
- 북방·남방 경제권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역할, 북핵 해결에 기여로 평화·번영 선순환

○ 구상의 의의와 배경

-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 시급**
 -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급락, 내수 시장 한계,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등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
- 북방 경제권으로의 **경제영토 확장**
 - 끊어진 남북한 경제 맥을 다시 이어 중국, 러시아 등 북방 및 유라시아로의 경제진출로 확보
-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변화 유도 위한 **실질적 접근 필요**
 - 경제를 수단으로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과 북한 변화 유도하여 경제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새로운 차원과 방식의 **남북경협 모색**
 - 김정은 체제의 눈높이(시장화, 정보화, 과학기술 중시 등)를 감안한, 지속발전가능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마련과 중장기적 경제통일에 대비한 상생의 협력 추진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29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비전

-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 개막으로 동북아 평화·번영

목표

- 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 ②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경제통일 기반 조성
- ③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구축(평화·번영 선순환 구조)

원칙

- ① 정경 및 민관 분리 : 안보와 경제 병행,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 ② 포괄적 호혜주의 : 유무상통 원리, 상호보완성, 포괄적 접근
- ③ 국제 규범 준수 : 시장경제 원칙, 국제성, 투명성 확보
- ④ 국제적 합의 기반 : 일관성, 국민 공감(합의), 단계적 접근

4대 핵심정책

- ① 환동해 경제벨트 ② 환황해 경제벨트
- ③ 적경지역 평화벨트 ④ 하나의 시장 협력

30

IV.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4대 핵심정책 : '3대 경제·평화벨트'(H字 경제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
 - 3대 경제·벨트 구축은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
-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 벨트) : 금강산~원산~백두산, 단천, 청진·나선의 공동 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 공동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 공동 구축
-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 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벨트 건설, 경의선 개보수와 고속도로 신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 신의주를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 등
- 접경지역 평화벨트(DMZ 접경지역 환경·관광 벨트) :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대로 개발, 생태·환경·관광의 '녹색(Green) 한반도' 실현
- 하나의 시장 협력 : 남북한 경제가 '시장'을 매개로 통합돼가면서 '하나의 경제권' 형성 추구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 통합을 지향(남북 생활공동체)

31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은 유사

- 북한 '10개년 전략' : 2010~20년까지 총 1,000억 달러의 인프라 등 투자유치계획 수립
 - 신의주-평양-남포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의 동북 방면을 양대 축으로 개발 계획
 - 남포 IT산업단지 등 공업지구 개발에 490~580억 달러
 -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258억 달러, 에너지 부문 100억 달러 투자 계획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2017) >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2011)' >



32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신경제 구상은 한국경제에게 신성장 동력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 제공
- 신북방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북한 경협 확대와 산업단지 건설 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을 마련

※ 신북방정책의 9-Bridges 전략 (블라디보스톡,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 9. 7):

- 가스, 전력, 철도, 항만,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한·러 사이에 9개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국가경제적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 금융시장 안정: 주가상승, 환율안정, Risk Premium 하락 -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 - 국방비 부담 완화	○ 생산 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 확대 - 북한 노동력, 천연자원 활용 → 산업 경쟁력 향상 ○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 농업(비료, 농기계, 비닐 등), 의약품, 식품 등
○ 내수 경기 활성화로 고용 확대와 경제 선순환 - 대북 투자 확대 → 한국 경제성장을 제고 → 고용 확대 → 소비 증가 → 소득 증가(성장) - 접경지역 개발 →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시장 활성화	○ 민간의 북한 진출 증가 - 경공업(섬유, 의복 등), 기계, 전기전자, 비철금속, 철강 등 ○ 관광, 운수장비 등
○ 성장 잠재력 확충 - 대북진출 기회 확대, 북방·유라시아로 경제영토 확장 - 물류비 절감, 동북아경제권 무역 확대 - 외국인 관광, 국제행사(MICE) 증가	○ 정부 차원의 대북 SOC 투자 확대 - 철도·도로·항만·전기·통신 인프라 건설로 철강, 시멘트, 기계, 중장비 분야 수요 증대

33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신경제 구상과 남북경협

- 남북관계 개선은 소비재와 유통·물류, 건설(SOC, 주택), 에너지, 관광에서 신사업 기회

< 북한의 대남 경협 희망 분야(2009) >

분야	희망 분야	주요 사업
생활 기반	주민 생활 향상	- 평양 생활집 단장 사업 공장(페인트, 샴시, 유리창) - 상하수도 및 농수로 정비 사업
물 류	물류 창고	- 대규모 물류 센터 건립 (개성, 신의주, 나선 등)
	내륙 물류 사업	- 냉동 탑차를 이용한 택배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철도 개보수	- 평양 ~ 신의주, 개성 ~ 평산 및 금강산 ~ 원산
SOC 사업	고속도로 개보수	- 개성 ~ 평양 ~ 신의주, 평양 ~ 원산 - 평양 ~ 묘향산 ~ 자강도 희천
	항만 현대화	- 남포항 시설 현대화(크레인 교체, 비상 전력시설 등)
에너지	중유 저장소	- 평양 인근의 중유 저장소 건설
	풍력 발전소	- 풍력 발전소(동해안 및 개마공원) 건설 - 태양열 난방 시설 건설
산업경제	자동차	- 중고 자동차 수입 및 정비소 사업
	제철소	- 남한 제철소로부터 하청 공장화 사업
	선박 해체	- 낡은 선박 해체 작업을 통한 철근 이용
	협동농장	- 해주 지역에 협동 농장 사업을 통해 계약 재배

34

Ⅲ.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한국경제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행의 한국경제 변화

① 사실상의 섬나라	▪ 대륙경제로 전환(대륙과 해양 경제 융합)
② 협소한 내수시장	▪ 규모의 경제(남북공동시장/동북아경제권)
③ 자원 빈국	▪ 자원 부국(안정적인 자원 확보)
④ 제조업 경쟁 심화(제조업 공동화)	▪ 세계의 공장으로 재도약
⑤ 짧은 산업 수명 주기	▪ 산업 수명 주기 연장(유휴설비 활용)
⑥ 선형(Linear) 단계의 성장패턴	▪ 도약형(Quantum Leap) 성장
⑦ 과도한 국방 부담	▪ 국방예산 절감 및 군수산업 활용 제고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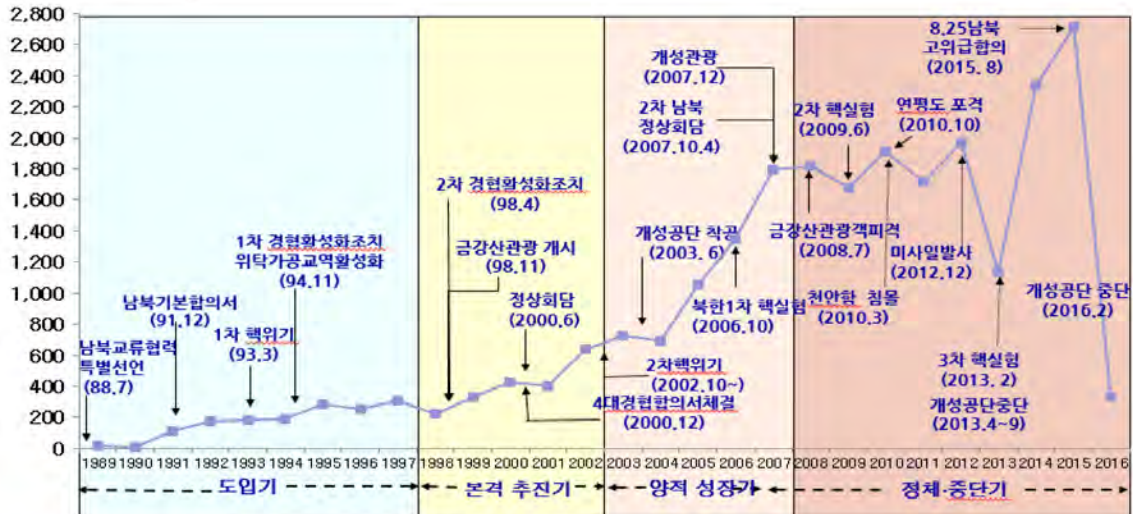
Ⅳ.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남북경협 28년 추이 평가

-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순수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군사적 요인에 좌우
 - 남북경협 태동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을 통한 대북 문호개방으로 공식 시작
 - 남북경협의 역사는 '남북관계 발전사'이며, 정부의 정책기조와 남북관계 흐름과 일맥상통

< 남북경협 추진 경과(1989~2016) >



37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 지난 28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남북교역 : 1989년 1,870만 달러 → 2015년 27억 1,450만 달러 (145.0배)
- 교역 건수 : 1989년 67건 → 2015년 100,907건 (1,506배)
- 인적 교류 : 1989~2002년 42,563명 → 1989~2015년 1,447,010명 (34배)
- 금강산-개성관광객 204만 6,695명을 포함하면 약 349만 3,700명에 달함

<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

	단위	2000	2005	2007	2010	2015	2016
총 남북교역	100만\$	425.1	1,055.8	1,797.9	1,912.2	2,714.5	332.6
교역 건 수	건	7,394	21,215	51,758	84,202	100,907	11,424
교역 품목 수	개	578	775	852	795	742	489
사업승인 수	건	6	83	188	37	12	-
상업적거래 비중	%	64.3	65.3	79.6	98.8	99.6	99.3
- 경협사업	%	20.4	39.2	39.6	76.0	99.6	99.3
- 개성공단	%	-	16.7	24.5	75.5	99.6	99.3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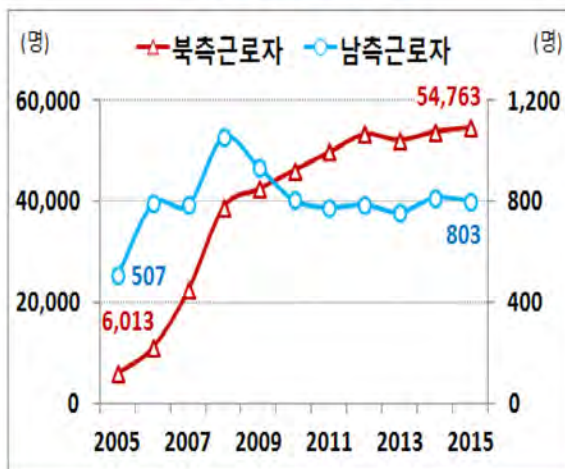
38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 사업 :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험장으로 발전

- 2000. 8. 22 현대아산-북측 아태평화위원회와 [공업지구 발전에 대한 합의서] 채택
- 2003. 6. 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 2004. 12월에 첫 제품 생산
- 2015. 12월, 남한기업 124개, 북한근로자 5.5만명 고용의 남북경제공동체 실험장 역할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생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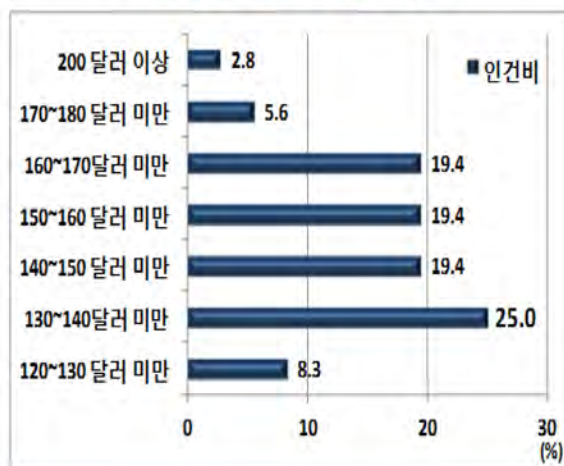
39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 사업 :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기여

- 해외공단 대비 우수한 경쟁력 확보 : 인건비와 토지가격, 언어, 지리적 위치 등 이점
- 월 기본임금은 중국의 1/3 수준, 베트남의 2/3 수준, 한국의 1/13 수준에 불과
- 1인당 월 노동생산성은 약 1천 달러로 북측근로자 평균임금 185 달러 대비 약 5배

< 개성공단 근로자 매월 인건비 >



<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추이 >



40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 시각

Moody's



Le Monde

무디스 : 토머스 번 국장 (2007. 2)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2007. 2)

"개성공단 PJ는 한반도의 미래"

골드만 삭스 (2009. 10) : 남북한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북한 노동자들은 강력한 근로윤리와 생산성 향상의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2013. 4)

"개성공단은 '두 개의 한국'이 만든 협력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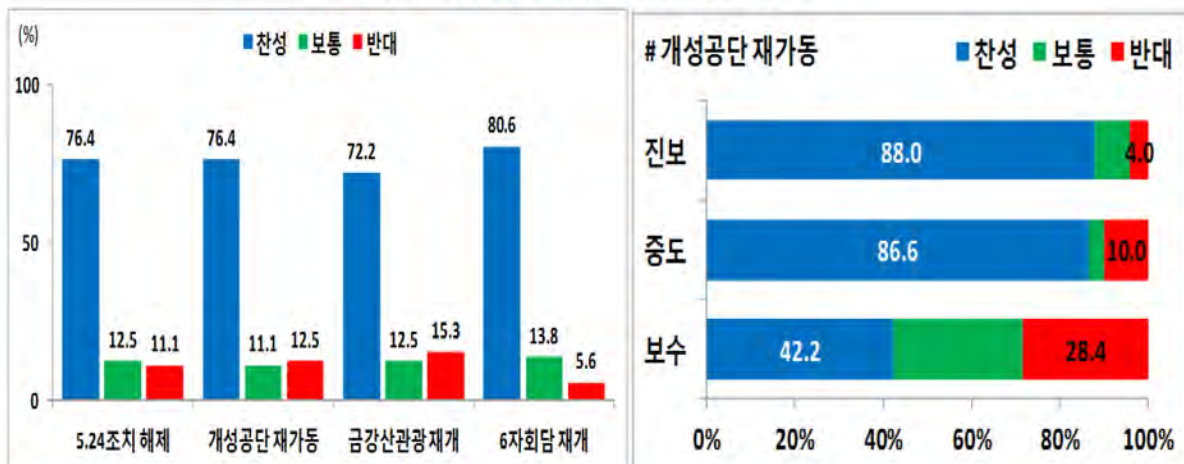
41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재가동에 대해 높은 찬성 입장 표명

- 전문가 조사 : 2017. 6. 14~21 (72명, 현대경제연구원)
- 전문가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 입장 표시, 반대는 12.5%에 불과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은 28.4%에 불과

<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2017.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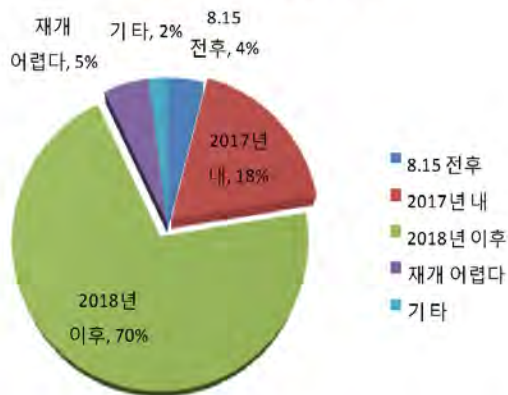
42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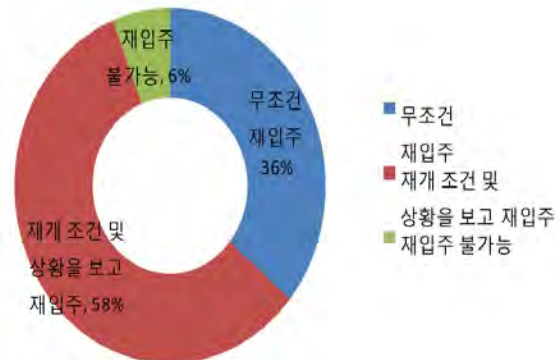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주기업 조사 : 재개될 경우 절대 다수가 재입주 의향 표명

- 입주기업 조사 : 2017. 5. 12~6. 12 (123개 기업 중 100개사 회신, 개성공단기업협회)
- 절대 다수(94%)가 중단 1년 반이 지나도 재입주 의향을 밝혔고, 불가 기업은 6% 불과
- 재입주 이유로는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물류비 등 높은 경쟁력(84.7%)을 지적

<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기 >



< 재개시 재입주 의향 >



자료 :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7. 6. 19.

43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남북경협의 한계와 문제점

- 정치·군사적 요인에 민감 : 대북 정책 기조와 북한의 도발 등에 많은 영향
- 북한 경제의 근본적 취약 : 설비 노후화와 산업인프라 낙후, 북한 당국의 인식 부족 등
 - 남북경협 확대는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 제공과 함께, 체제불안의 요인이란 이중성 존재
- 법·제도적 장치 미비 : 3통(통행·통관·통신)과 4대 경험합의서 등의 미이행 및 위반시 해결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부재, 대북경제 제재 등
- ✓ - 북한 인력에 대한 관리 한계 :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불안, 노무관리 자율성 부족
 - 특히 질적 관리 차원에서 북한은 인력 교육 거부와 국내 기술자의 장기 체류 제한 등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 → 직업능력개발 교육 필요
- 사업의 수익성 실현 부족
 - 남북경협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투자물건의 북한지역 소재로 금융담보에 한계
 - 남북교역 업체간 과당경쟁 및 부당거래 등으로 수익성 저하, 북측의 잘못된 거래관행 유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남북경협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미흡, 핵·미사일 발사와 군사 도발 지속
 - 대북 '퍼주기' 및 '남북경협 자금의 WMD 개발 전용 의혹' 논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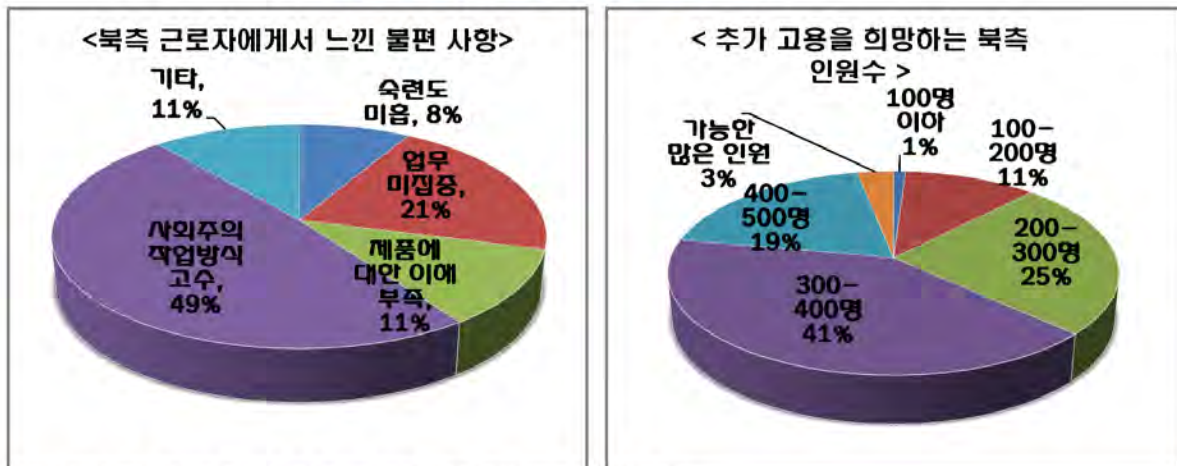
44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실태 조사

- 응답 : 입주기업 125개 중 61개 업체 (법인장 등 면접 조사, 2014. 6. 1~9. 30)
- 노동 인식 미흡 : 오랜 사회주의 노동문화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수동적 노동 의식
- 불안정한 인력 공급 : 1단계 사업을 위한 추가 입주 시에도 약 10만 명 부족 상황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실태 조사 >



자료 : 남성욱, 개성공단의 효율적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발전 방안, 2014.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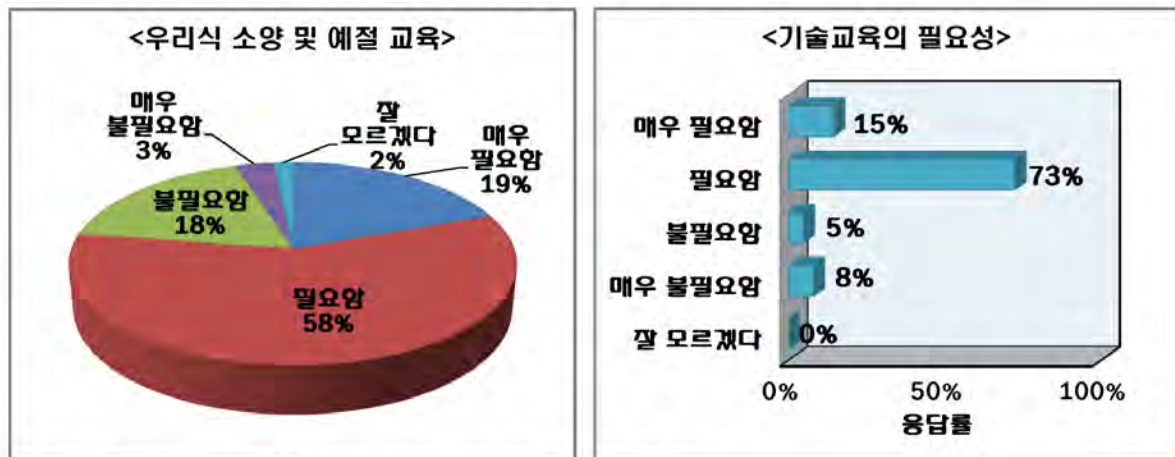
45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실태 조사

- 입주기업들은 소양교육(77%)보다 기술교육(88%)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인식
- 소양 및 예절 교육의 필요성 :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7%에 달함
- 기술교육의 필요성 : 10명중 약 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 반대 입장은 13%에 불과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실태 조사 >



자료 : 남성욱, 개성공단의 효율적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발전 방안, 2014. 11. 13.

46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북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

- 남북간에는 분단 70년의 이질적 체제와 문화,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은 물론 직업에 대한 인식과 교육, 훈련체계 등에서 큰 격차 존재 → 노동생산성에 큰 격차 영향
 -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인센티브와 자유경쟁)와 사회주의 폐쇄경제(공동 생산-분배)에서 오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우 큼
- 교육 및 산업인력 양성 기관의 시설·장비·기자재 등의 기본 인프라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함
 - 고급인력 부족 : 2016년 현재, 북한의 중고등 학생수는 인구 1천명당 남한의 1,600여명 보다 많은 1,900여 명이나, 대학생은 750명으로 남한 3,520명의 21.3%에 불과
 - 산업별 취업자 비율도 북한은 1차 산업(37.4%)이 가장 높고, 남한은 서비스업(69.9%)임
-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재개시 활성화와 생산성·수익성 제고,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한국의 첨단 부문 국가경쟁력 제고 및 북한 주민들의 북한 지역 정착(통일 후 인구이동 억제)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지원 필요
- 따라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양성 인력의 활용 등의 지원이 요구
 - 교육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기술·산업인력 양성은 곧 제품의 질과 생산성과 연계

47

IV.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 개발

○ 인적자원 개발 방안 : 교육 인프라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현장실습 강화

- 첫째, 교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 학술 교류 추진
 - 교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 : 대북 교육 기자재와 학용품 지원, 교육용 비디오와 TV 지원 등
 - 학술교류 : 산업 분야별 학술 및 정보 교류, 공동 연구, 해외 시찰단과 연수 및 파견 등 지원, 산학연 운영기구 설립, 남북간 산학연 공동 연구와 평양과기대 모델의 확대 적용
-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동 생산 활동 확대 등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남한의 교육 프로그램 전수 및 남북 공동 개발, 전문가 파견 등, 나아가 자매결연 형태로 상호 교류 확대 등
 - 경험 활성화를 통한 공동 생산활동 확대 : 개성공단과 북한 내륙 및 북중·북러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교육 및 활용 경험 쌓기,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활용, 현지 근로자들의 산업일꾼으로의 양성과 중간간부로의 육성
 -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현장(개별 기업별)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점차 산업별·지역별 합동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직업 훈련 컨소시엄 구성)
- 셋째, 전문교육 습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해외 사업에서의 북한 인력 활용 확대 등
 - 기술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 남한 전문가격을 취득한 북한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지급 등
 - 해외에서 북한 인력 활용 확대 : 중국, 러시아, 몽골은 물론, 중동이나 유럽 등지로 공동 진출
- 넷째, 당국간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협정 체결과 협의체 구성·운영, 국제기구 통한 북한교육 부문의 정부 참여 확대 등

48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임정빈 성결대 교수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방안

임 정 빈
(성결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북한의 산업화와 직업능력개발
-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 IV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I. 서론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기반은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한데, 직업능력개발(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임,
- 통일시 북한 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한데, 그 수단으로 북한 현지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준비가 필요함
-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면,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차원의 지원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거나 오히려 큰 경제적 이득을 달성할 수 있음.

3

I. 서론

- 북한지역 주민들이 직업능력을 향상하여 자발적인 직업안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북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 비용(고용, 복지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임
- 통일을 전후하여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 등으로 북한지역에 많은 산업인력이 필요하고, 개성공단(현재 중단) 경험처럼 통일 후 북한지역의 노동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바, 북한지역의 경제건설 및 많은 기업의 진출 등으로 현지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교육개발능력 체제 구축은 그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1

II . 북한의 산업화와 직업능력개발

1. 북한의 산업정책 변화

제2차 5개년 계획 (2003-2007)	제3차 5개년 계획 (2008-2012)	제4차 5개년 계획 (2013-2017)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 건(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간산업 정상화 등 8 개 부문의 53개 대상)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에너지문제 해결(전력생산, 전기절약)
	인민경제의 개선, 현대화(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자재, 국 토환경)	공업주체와 현대화(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 설, 자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인민생활 개선(7개 부 문)	식량문제 해결(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먹는 문제 해결(농업, 축산, 과수, 수산)
첨단과학기술(5개 부문 37개 대상)	첨단과학기술(IT, NT, BT, 에너 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 마)	첨단기술 비중 제고(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기초과학(4개 부문)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 물, 지리)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5

II . 북한의 산업화와 직업능력개발

2. 북한의 직업능력

-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은 발전적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낮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 북한은 11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년 인구가 현대적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대학교육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데다, 경제난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서도 출석률 하락, 수업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규모와 질은 미흡할 것으로 추측됨(김석진 외, 2011: 51).

6

II. 북한의 산업화와 직업능력개발

- 북한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직 인력으로 적합한 노동인구가 풍부하게 존재. 북한의 공식통계 의하면, 취업인구중 36%, 농림어업, 30% 광공업에 종사.
- 1990년대 초 경제난 이후 북한의 광공업 부문 가동이 정지된 기업소들이 많아 광공업 취업인구 중 상당수는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에 대한 계획을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어야 함.
- 북한지역의 산업 변화와 함께 전환기 북한지역의 직업교육훈련 대상도 중요함.

7

II. 북한의 산업화 직업능력개발

- 북한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 외는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음.
- 북한은 남자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는 55세까지 의무적으로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며, 유아나 학령기 학생을 제외하면 표면상 실업자는 없으며 모두 직장에 소속.
- 현 체제 하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자는 재직자가 주가 될 것임. 그 외 고등중학교 졸업후 취업 경우, 취업업체에 기능공학교가 개설되면 6개월간 기술교육 수료 후 직장생활을 하는 기능공학교과정이 있음
- 공장·농장·어장에 대학(공장대학만 80여개, 대학졸업증을 발급함)부설로 설립, 일과 학습 병행, 간부 육성하는 과정이 있으며, 각 기업체에서 기술 지도를 위해 주1일 기술학습을 함. 이들 모두가 직업교육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8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조사설계

- 본 연구에서는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및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야, 전환기 북한지역(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체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전환기 북한지역 주민(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운영, 고용서비스 제공 등 3가지 부문으로 프레임 워크하고 이에 따라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9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25일간 실시함
- 조사대상자는 북한 및 북한 직업훈련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인력이 설문지 직접 배부, 우편조사,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집
- 수집된 설문은 30부로 전체를 분석에 사용하여 인식조사의 분석을 실시함

10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통일대비 북한주민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안)

영역	정의	하위요소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 대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 제도의 제. 개정 및 재정 확보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제. 개정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제도 마련 ·자격제도 및 정보시스템 개편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직업능력개발 자원 확보 ·직업능력개발 시설 구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북한 주민 대상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훈련과정)의 제공	·직업능력개발 설비 및 기자재 확보 지원 ·신규 직업능력개발 교. 강사 양성 ·기존 직업능력개발 교. 강사 재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자격 검정 및 관리
고용서비스 제공	북한 주민 대상 구직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상담 등) 양성 ·북한주민-훈련과정 매칭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II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3.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야 분석

- 현재 북한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필요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필요없음	0	0	0	0
필요없음	0	0	0	0
보통	1	3.3	3.3	3.3
필요	5	16.7	16.7	20
매우필요	24	80	80	100
합계	30	100	100	

12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2>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의 사회통합 기여 여부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도움안됨	0	0	0	0
도움안됨	0	0	0	0
보통	0	0	0	0
도움	8	26.7	26.7	20
큰 도움	22	73.3	73.3	100
합계	30	100	100	

13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3> 직업능력개발지원단 구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필요없음	0	0	0	0
	필요없음	0	0	0	0
	보통	2	6.7	6.7	6.7
	필요	10	33.3	33.3	40
	매우필요	18	60	60	100
	합계	30	100	100	

14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4> 직업능력개발지원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앙정부	10	33.3	33.3	33.3
	지방정부	4	13.3	13.3	46.7
	공기업	2	6.7	6.7	53.3
	민간기업	1	3.3	3.3	56.7
	시민사회조직 및 종교단체	0	0	0	56.7
	대학(폴리텍 등)	2	6.7	6.7	63.3
	연구기관	7	23.3	23.3	86.7
	국제기구	2	6.7	6.7	93.3
	기타	2	6.7	6.7	100
	합계	30	100	100	

15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5>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지원에 적합한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현금지원	2	6.7	6.7	6.7
	현물 및 기자재	10	33.3	33.3	40
	교육훈련프로그램지 원	16	53.3	53.3	93.3
	지원인력(교, 강사)	1	3.3	3.3	96.7
	교. 보재	0	0	0	96.7
	기타	1	3.3	3.3	100
	합계	30	100	100	

16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6> 전직프로그램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필요없다	0	0	0	0
	필요없다	0	0	0	0
	보통	0	0	0	0
	필요하다	14	46.7	46.7	46.7
	매우필요하다	16	53.3	53.3	100
	합계	30	100	100	

17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7> 알맞은 전직프로그램 설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직 직업훈련원 설치	11	36.7	36.7	36.7
	현재직장 내 직업훈련 강화	3	10	10	46.7
	제휴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용	6	20	20	66.7
	북한직업관련 학교 활용	10	33.3	33.3	100
	합계	30	100	100	

18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8> 전환기 북한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방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현재 남한체계와 동일	3	10	10	10
	현재 북한체계와 동일	1	3.3	3.3	13.3
	한국체계 중심 보완	10	33.3	33.3	46.7
	북한체계 부분 보완	11	36.7	36.7	83.3
	완전히 다른 제3의 체계로 전환	3	10	10	93.3
	기타	2	6.7	6.7	100
	합계	30	100	100	

19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표 9> 한국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격제도 방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현재 남한자격제도 중심으로 북한자격제도 수정보완	5	16.7	16.7	16.7
	현재 북한제도중심 남한제도 수정보완	0	0	0	16.7
	남한의 자격제도 중 북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제도	6	20	20	36.7
	북한자격, 한국자격 상호인정 및 자격인증절차 강화	18	60	60	96.7
	기 타	1	3.3	3.3	100
	합계	30	100	100	

20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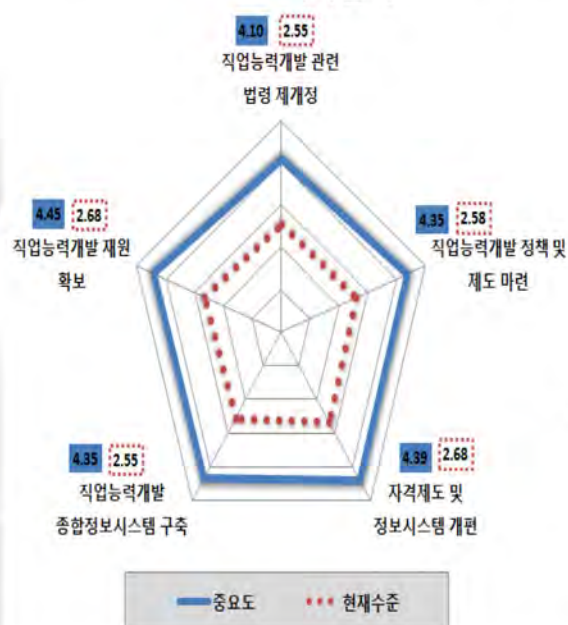
4.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 격차분석

영역	정의	하위요소	중요도 (기대수준)	만족도 (현재수준)	Gap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 대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법, 제도의 제 개정 및 재정 확보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제·개정	4.10	2.55	1.55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제도 마련	4.35	2.58	1.77
		자격제도 및 정보시스템 개편	4.39	2.68	1.71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35	2.55	1.80
		직업능력개발 자원 확보	4.45	2.68	1.77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북한 주민 대상 다양한 직 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훈 련과정)의 제공	직업능력개발 시설 구축	4.55	2.65	1.90
		직업능력개발 설비 및 기자재 확보 지원	4.61	2.71	1.90
		신규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양성	4.84	2.77	2.07
		기존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재교육	4.58	2.77	1.81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4.74	2.87	1.87
고용서비스 제공	북한 주민 대상 구직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자격 검정 및 관리	4.81	3.06	1.75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상담 등) 양성	4.77	3.10	1.67
		북한주민-훈련과정 매칭 서비스 제공	4.90	3.16	1.74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4.84	3.26	1.58
		직업능력개발지식 운영(행정)시스템 컨설팅	4.94	3.26	1.68

21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그림 1>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구축 영역
격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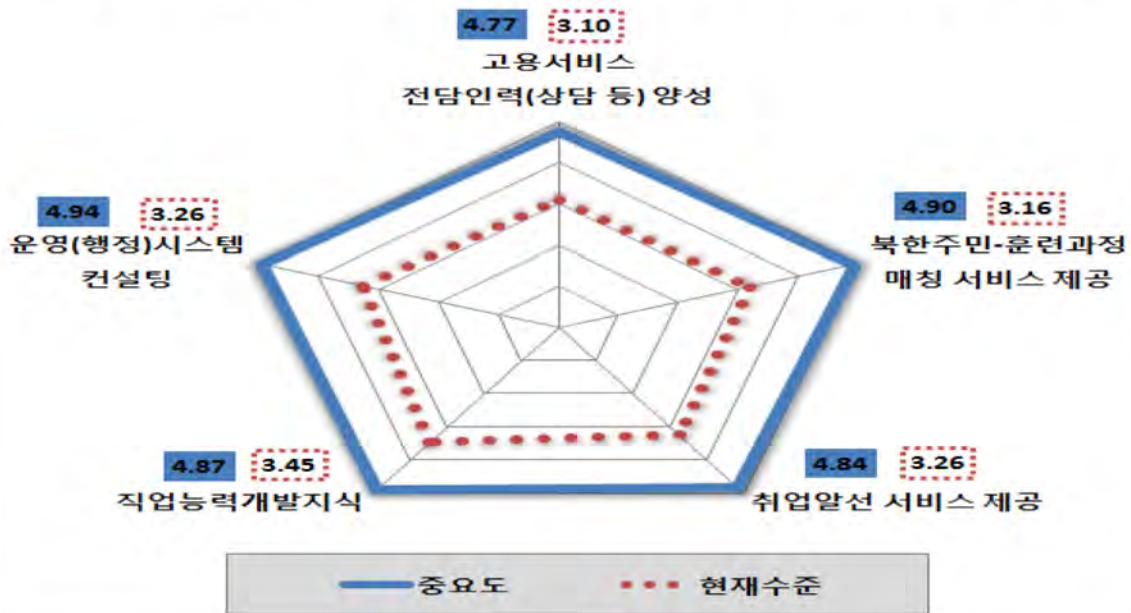
<그림 2>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영역 격차분석



22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그림 3>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영역 격차분석



23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5.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시사점

- 현재의 북한지역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개방형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북한지역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4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 충분성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를 5. 24조치와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한 경제교역 중단, 북한의 소극적 태도, 한국정부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 체제전환기 등을 대비해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험적인 지원체계 노하우 축적, 통일 대비한 북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북한기업의 발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지원과 교류 협력 등을 들고 있음

25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2) 남한과 차별화된 직업교육훈련분야 지원공단 필요성, 조직형태, 운영방안

- 첫째, 북한의 실정에 맞는 북한형 직업교육훈련 지원공단의 필요성, 북한주민들의 직업기술고도화를 통한 경제개발 필요성, 남북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경제체계조성 및 번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원공단 필요
- 둘째, 조직형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 활용 방안, 공기업 설치, 남한의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조직 등을 대안이 필요함.
- 셋째, 체제전환기 북한의 경제운영구조가 시장경제 체제와 유사할 것이므로 지원공단의 운영은 남한의 직업교육체제와 비슷하게 운영 되어야 함.
 - 기능과 운영은 전적으로 남한의 교육훈련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과 북한의 전문교육인력이 공동으로 운영 필요

26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3) 북한체제전환기 남한과 차별화된 고용지원센터 운영

- 첫째, 북한지역의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북한노동력의 활용이므로 매우 필요
 - 북한은 고용관련 기구가 없어 직업정보와 직업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남한사회와 통합 시 적응에 큰 혼란이 예상됨.
 -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있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센터 필요
- 둘째, 고용지원센터는 지원공단과는 달리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작은 기구이지만 북한의 전역에 지사를 두는 조직형태를 가져야함
- 셋째, 고용지원센터는 북한의 기업소의 노무관리, 산업인력화를 고려한 기능이 필요.

27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4) 북한체제전환기 남한지역과 차별화된 전직지원센터 설치 운영

- 체제전환 시 대량 전직상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 최소화, 남북한 교류 및 통일 대비, 기존 산업의 직업이 더 이상 직업으로서의 지위 상실 해소 를 위해 필요
- 조직운영 형태는 통일 전환 시기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을 위한 조직형태,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팀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남한의 전직지원센터의 조직구조와 형태에 따르면서도 북한만의 전직행태와 수요를 감안한 특수 부서를 추가하는 형태가 필요

28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5) 북한체제전환기 남한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 첫째 북한 근로자 및 기능공들의 교육훈련 유도 위해 필요, 교육훈련의 북한주민들 선택지 다양화와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
-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는 다양하고 충분한 민간 교육훈련 공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교육 수요자 요구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식으로 유용
- 둘째, 차별성의 경우 먼저, 남한에는 현재 카드중심으로 바우처 제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북한에는 카드사용 환경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차별적으로 현금이나 대체형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기능 및 운영형태는 먼저, 북한의 당, 군대, 검찰, 법원 등 체제수호기관들에서 대량으로 발생할 전직자들의 희망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심리상담과 생계대책, 직업개발 정보의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야함

29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6) 북한체제전환기 북한지역 노동자 활용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 기본방향은 자격제도의 통일된 표준안 마련 및 남북한 공용의 직무능력표준 확보, 기존 남한의 제도를 이용하되 분야별로 다소의 융통성 발휘하는 한시적 자격제도 운영, 공공훈련기관과 기업 중심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자격제도 설계와 평가체계 구축, 북한자격인정 기본 규정 제정의 필요성 임
- 자격제도 활용방안으로는 남한의 NCS 기준 자격인증제도의 기본적인 틀 유지, 남북의 특수한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잘 접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가 자격을 상호 호환할 수 있는 방식 활용 등임.
- 한국기업에서 사업장내 자격 활용방안의 경우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수립되어 직업훈련체계 일상화 전에 기업들에 일정 정도 사내 자격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위임하며, 점차적으로 공적 자격인증제도를 확대해야 함

30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7) 북한체제전환기 남한지역과 차별화된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방안

- 첫째, 기본방향은 북한지역 주민들은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점 고려, 시장체제 및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제고 중심으로 직업훈련 실시.
- 둘째,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국내 교육훈련환경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한 통합 실업자 교육훈련은 자칫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갈등 요소만 증폭 될 수 있음. 대학(폴리텍 등) 및 공공분야 공급 중심으로 계층별/기능별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셋째, 직업훈련과정 심사, 승인 제도는 심사는 남한의 심사위원과 북한측 위원을 대체 할 수 있는 탈북민 출신의 직업훈련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남한과 달리, 공적 심사제도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민간 심사제도를 확대

31

III.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8) 북한체제전환기 북한지역주민 직업교육훈련분야 정책 및 제도구축

- 첫째,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직업교육훈련 실시, 남한의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북한에 이식에 하는 방법 채택, 점차 직업교육훈련이 정착되면 다음 단계로 민간의 역할과 역량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필요
- 둘째, 모든 북한 주민이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독일의 경우 비적응 혹은 비적합 인력은 '사회복지' 분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
- 셋째, 직업교육훈련은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전직의 경우 새롭게 직업을 구하는 경우 및 실업자 대책도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추진지원기관을 구성하고 지원해야 함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 구축을 준비필요한데 특례법, 기금조성법, 기금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수요에 미리 대처하여야 함

32

Ⅳ.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1. 직업교육훈련 관리 공단 설치

- ◆ 남북 경제교류와 통일 대비 북한노동인력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근로자 직업 교육훈련 강화로 산업인력 북한 주민들은 안정된 사회생활과 남북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므로 직업교육훈련 관리공단 설치의 필요
- ◆ 기능 및 운영은 직업교육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 직종개발,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직업진로, 고용사업추진 기능을 수행.
- ◆ 직업훈련 직종개발은 북한주민의 경력, 학력, 선호도가 반영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을 이수할 경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연계체계를 개발
- ◆ 북한 주민의 연령과 수준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동일직종 내 수준별 직업훈련이 설계하며, 지역 특성 반영 거주지 참여가 용이하게 정책을 수립,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북한주민이 새로운 고용환경에 적응 위한 교육훈련 관리체계 필요

33

Ⅳ.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2. 북한지역에 고용센터 설치

- ◆ 고용센터는 직업안정법 및 고용안정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직업진로지도, 취업지원, 지역고용사업추진 기능 등 종합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시켜 좋은 일자리 갖게 하는 것, 사회안정과 통합 더 나가 통일 앞당길 수 있도록 북한지역에 고용센터 설치 운영 필요
- ◆ 북한에 설치될 고용센터, 취업희망자로 하여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함
- ◆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동향 분석 및 기업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함.
- 구직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신규 프로그램 개발, 구직환경 반영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분석팀 통한 지역고용사업추진을 위한 정보확보 및 대응 필요

34

IV.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3. 전직 지원센터 설치

- ◆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전직 준비할 충분한 여건과 시간이 부족, 변화된 일반사회로 전환 시 취업경쟁력 약하고,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함
- ◆ 진로상담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일반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직지원센터의 역할이 절대적 중요
- ◆ 주요기능
 - 첫째, 전문컨설턴트 활용 취업희망자의 진로결정, 경력설계 및 취업 컨설팅 지원을 해야함.
 - 둘째, 공공 및 민간기관, 협회, 기업체, 대학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행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해야함
 - 셋째, 직업교육훈련비와 전직지원금 등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 지급, 기업 등의 채용계획 수집과 각종 직업창출활동, 취업 희망자에 적합한 채용 정보 제공
 - 넷째, 기업 협력 활동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발굴로 취업 촉진, 워크숍·사이버 교육·이력서 작성 및 면접지도와 순회상담 및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 전직 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
 - 다섯째,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 조달, 창업능력 향상 등 창업컨설팅을 지원해야함.

35

IV.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4.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 ◆ 바우처제도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고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효율화 가능함
- ◆ 바우처제도 강점은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함.
- ◆ 훈련기관 선택의 자유를 보장, 주어진 예산 내 자원배분 스스로 결정, 교육훈련 수요자 자유선택이 시장경쟁 촉진, 전체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정확한 정보유통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
- ◆ 교육훈련 바우처의 주요 타깃집단은 일차적으로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적용할 실업자는 전직실업자임
 - 교육훈련생의 부적절한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으로 재취업률 및 중도 탈락률 측면에서 훈련실적이 나빠지거나 훈련생 수가 격감하지 않도록 훈련의 품질보증 장치를 마련해야함.
 - 훈련성과에 대한 개인 및 훈련기관의 책무성을 부과하여야 함. (예: 훈련비의 일정비율(약10% 이내) 개인이 지불하고, 훈련기관은 70% 이상의 재취업률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 필요

36

IV.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주요 추진체계 구축방안

5.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위해서 직업훈련기관의 합리적 조정통제가 필요
- 첫째, 전환기 북한지역에 민간직업훈련기관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난립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둘째, 우선선정 직종훈련 대상 직종의 타당성을 제고 필요.
 - 제조 및 건설업에서 많은 인력 요구가 예상되나 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중심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인 점에서 목표 집단별로 실업자 직업훈련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별 특성을 강화해야 함
- 셋째, 대한상의 위탁훈련의 산업별 숙련인력 양성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해야함.
- ◆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서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제도 운영이 필요

37

감사합니다

Part



종합토론

좌 장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토론자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승용 前 한국폴리텍대 강릉캠퍼스 학장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MEMO

MEMO

MEMO

MEMO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남북한 경험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 성과확산팀